

# 데스크시각

오주승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다.”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이다.

물론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한 지역의 수장인 서울시장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의 집권은 정책 대변화를 예고했다.

## 총선 후 쟁점화, 후안무치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공격 타깃은 일차적으로 혁신도시를 향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방법이 참 지저분했다. 우선 혁신도시 논란이 제기된 시기가 ‘4·9총선’ 직후라는 시점상의 미묘함이다. 총선 때는 지방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쟁점화를 피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도권을 제외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혁신도시 추진에 변화가 없음을 공언하며 표를 얻었다. 정치적 계산으로는

합의체계에 충실한 한 편의 연극이었다. 연극의 주연은 유력 중앙지와 혁신도시 추진주체인 국토해양부,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싱크탱크인 국토연구원이 맡았다. 포문은 신문이 열었다. 이들은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등의 내부보고서를 인용하며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토해양부의 행태 또한 불만했다.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추진을 총괄한 주무 부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재원 마련과 기업유치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보고했다. 똑 같은 사안을 놓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180도 입장을 바꾸었다.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효과를 선전해왔던 국토연구원은 당시 보고서가 ‘엉터리’라고 자인하는 용기(?)까지 보였다. 한발 더 나아가 국토정책을 ‘균형’에서 ‘특화’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결집해 이명박 정부와 코드를 맞췄다. 혁신도시 추진에 소극적인 부처를 감사하고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던 감사원이 돌변해 혁신도시가 과대표장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또한 웃기는 일이다.

## 혁신도시 뒤집기 안된다

갑자기 혁신도시를 국가 재원을 까먹는 애물단지이자, 태어나서는 안될 사생아로 전락했다. 그것도 혁신도시 탄생을 주도한 기관들에 의해서다. 부모가 자식을 부정할 꼴이다. 그러다가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이게 아닌데’라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그렇다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혁신도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밧고로 싸움 정도로 전락해 버렸다.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인위적이거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애초 의도는 실종됐다.

혁신도시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며 급한 불을 끄었다. 그러나 이결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눈치만 보던 공공기관들은 이전과 관련된 절차를 중단했다. 정부 부처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일시중단했다. 말로만 계획대로이지, 실제로는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 권력 입맛따라 오락가락

정부의 지방정책 뒤집기는 혁신도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인 J프로젝트(서남권관광저도지)나 S 프로젝트(서남권개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광주일보와의 인터뷰(2007년 10월23일자)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착수한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사람들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지방사람들을 변방으로 몰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서울공화국’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지 않는가.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 시설

### 세계·금융규제 완화 시급한 지방 주택시장

지방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권 판매제한 기한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최장 5년간 팔 수 없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판매제한, 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등 무더기로 쏟아진 규제가 지방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판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입주 전 판매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 판매제한만큼은 고사직전의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세대를 넘어가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건설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세입자 감면을 기대해 온 지방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시기를 미루고 있어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판매제한 완화는 투자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눈덩이

처럼 늘어난 미분양 주택 해소책으로는 역부족이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실시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판매제한, 담보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등 무더기로 쏟아진 규제가 지방의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시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감질나게 단계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시기를 놓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 지방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중부세·양도세 등 세급 감면을 약속했으나 아직껏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미분양 해소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지방 비무기지역에 대해 대출제한 완화 조치와 취·통세 및 양도세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잇단 개인정보 유출 IT강국 부끄럽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된 옥션 사태에 이어 이동통신업체인 LG텔레콤 일부 가입자의 정보가 새나갔다. 청와대 전 산망도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 인터넷 상의 개인 및 국가정보가 속수무책인 채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총격이다. LG텔레콤에선 일부 가입자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서버 주소가 유출됐다. 다행히 가입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고 370명 가운데 199명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공개돼 피해가 적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름과 ID,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 옥션에선 최근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전체 국민 20% 이상의 개인정보가 몽땅 도둑을 맞은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생활은 침해 받을 수밖에 없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거나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 피싱(전화로 통한 금융사기)이다. 주변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거나 시달려 본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되고 청와대 전 산망까지 해킹 당하는 것은 국가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해킹이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개인과 업체, 은행 계좌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거래 사이트 옥션에선 최근 회원 1천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전체 국민 20% 이상의 개인정보가 몽땅 도둑을 맞은 것이다.

## 無等鼓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취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방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관련 정보를 흘러다가 벽에 부딪히자 ‘보안을 통한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방의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의 여러 해명을 종합해 볼 때 지체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바로 정부기관의 해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기본방침인 만큼 혁신도시에 우선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초 이전 대상 공기기업이 들어서지 않아 경제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 정부에 상응하는 보전을 해주겠다는 했던 공기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혁신도시를 ‘5+2광역시권’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당초 취지대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갈 특화된 도시로의 기능은 도외시한 채 단순 산업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겠다는 구상도 마찬가지다. 현재 추진중인 전국 10개 혁신도시들은 IT, 클린에너지 등 저마다 특화된 명품도시로 탄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명품화한다는 구상은 괜한 트집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의 원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민간기업 등이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 1950년대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해 성공을 거둔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 일관성이야말로 국민 믿음의 원천이요 대외신인도 고양의 척도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 '명품' 혁신도시



심상돈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날씨가 운동하기에 딱 좋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으로 인한 부상이 많이 생긴다. 며칠 전 야외에서 운동하던 중 동료 한 명이 꽃밭에서 놀고 있던 벌을 비닐봉지로 잡은 뒤 평소부터 아프다던 어깨에 벌침을 놓았다. 한의원에 가면 한방에 5천원인데 여기서는 공짜라며 주위 분들에게 권유 하였다. 그러면서 한의원에 가니 한의학은 3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한 100년 정도로 역사가 짧은 양의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 한다. 어찌 생각해 봐야 할지.. 최근 들어 의료 일원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민간차원 및 의료계 내에서 이

라고 밝혔다. 의료 일원화의 중심 근거는 첫째, 한방진료는 진료방법과 임상처방 및 치료 효과에서 과학적 검증이 안되고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 둘째, 질병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진료방식도 변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는 환자들로 하여금 판단의 혼란 및 의료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넷째, 한방의료에서 현재 사용하는 과학의료장비는 결국 한방 의료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다섯째, 중국이나 일본의 의료현황과 비교 시 그리고 서구의 대체의학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 일원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다.

## 봉침(蜂針)과 물리치료

투어지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2004년 서울 모 한방병원에서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설치 운영하다 보건소로부터 사용중지 명령 및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한방병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의료계와 한의계는 극명한 입장을 대조시켰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와 중심으로 의료 일원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 반면 대한한의학회는 이번 판결을 의료 일원화 화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의료 일원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로 ‘굿모닝닥터’에서 2005년 2월1일부터 15일까지 의사 786명을 대상으로 의료 일원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32%는 부정적이

의협에서는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구별을 없애고 통합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졸업 후 모두에게 동일한 신체 통합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종합병원에 한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등의 의료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론 이외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두 학문 간 사용하는 의학 용어의 통일 및 의학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또 자격제도의 개편 기간 동안의 사회적 혼란도 해결해야 하며, 신설 의대나 기존 의과대학 내 학제를 모두 새로 정립해야 한다. 현재의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칫 밧고로 싸움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우선 의료 일원화를 공론화시키는 게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의술이 최고’라는 고집보다는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질의 의료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동아병원 원장> 2006년 11월 수상자

은편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자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미 쇠고기 전면 개방... 축산농가 피해 특별 대책 절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18일 타결돼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개방된다. 광우병을 유발하는 소의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양국의 최대 현안인 FTA의 국회 비준 동의 때문이지만 너무 많이 양보한 협상인 것 같다. 많이 내주고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사료값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실에서 미국 쇠고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가격 하락은 불보듯 하고 이로 인해 도산하는 축산 농가가 발생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을 현실에 맞도록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도 품질로 승부를 겨루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동욱·광주시 동구 신수동

## 기고

박상선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22일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제창으로 시작돼 올해로 38돌을 맞이했다.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사회운동이 명멸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호응과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시대적 역할의 임무를 담당해왔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시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를 외치며 시작했다. 그 이후 줄곧 이 나라이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적 과제가 대두될 때마다 새마을운동은 나름의 역할을 발휘해왔다. 현장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헌신 봉사 해온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은

양면에서 취해진 최소한의 행정·재정적 제도들이 시세 흐름에 따라 줄거나 없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추세다. 이에 따라 새마을 민간분야도 시대변화에 맞게 그동안 자립과 자율추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중사자로서 부러울 일이지만 일부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새마을사무를 지방정부 사무와 민간분야 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 기구표에는 새마을과가 주요 기구로 존속하고 있고 보건의료망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한다. 아울러 외국과 긴밀한 새마을 교류사

## 새마을운동 38돌을 맞으며

오늘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같은 어려운 과제가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이 배전의 각오로 그 진가를 발휘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특히 호남은 최근이 원초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을 겪으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이 휩싸여 있다. 더욱이 호남 새마을운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제도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일부 행정·재정 지원은 받는 죄로 불쾌한 꼬리표가 달라 붙는다. 새마을을 행정의 연속선에서 시작해서 평가하려 한다. 일부 여론도 흥분나서 가려져 있어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다. 그러나 원초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은 원래 새마을운동이 국가사무로 추진되다가 민간분야로 이양되면서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뜰이나 국가사무가 민간분야로 이

업도 진행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고통치자가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자 제안을 하는가 하면, 자국 공직자들을 새마을연수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 많은 중국의 공직자들이 호남을 방문하여 새마을교육을 받았고 일선 새마을현장을 시찰하고 돌아간 바 있다. 새마을운동이 국내적으로 보다는 국제적으로 더 호평을 받는 지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착잡함을 지을 수 없다. 왜 우리들은 우리 것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고 자랑스러움을 주저하는지, 해외근무에 앞서 일부 주재원들은 새마을에 대한 기본이해를 하고 가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데 이는 새마을운동이 국가브랜드로서의 위상이 해외에서부터 싹트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새마을운동이 우리의 후대로까지 면면이 이어져 위대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새마을회 사무처장>

## 농어촌 어린이 교육·보육 공공시설 마련을

농번기가 되면 농촌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해진다. 비록 기계화가 되었다고 해도 기계로 할 수 없는, 농민의 손길은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70~80세 넘는 노인들마저 불리한 몸에도 애써 농사를 뜯게 된다.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이다. 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농촌 가정은 더욱 힘겹다. 일은 많고 아이들은 마땅히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또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학교가 멀어지면서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농번기철에 농촌 아이들과 부모를 배려해 방과후 학습지도를 겸한 탁아소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의료 사각지대에 군 입대를 대신한 공중보건의료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듯이, 유아와 어린이의 위탁이 필요한 농어촌에도 공공보육시설을 마련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교육과 보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미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경제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 1 부 2200-618	체 육 팀 2200-627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사회 1 부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